

◆ 25년 6월 고1 16~20번

[16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시민이란 법에 보장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다. 시민에 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하여, 로마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중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 의무의 근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상이다.

자유주의는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으로,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자연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선천적인 권리로서 천부인권이라고도 한다. 자유주의에서는 이러한 자연권이 시대나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라고 보았다.

자유주의는 국가보다 개인을 우선한다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들이 모여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관점은 시민의 의무에 관한 견해에서도 잘 드러난다.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 권리를 우선시한다. 또 불가피하게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개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

자유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를 중시했는데, 이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극적 자유는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으며, 간섭이 없는 상태인 방임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일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소극적 자유와 함께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였다. 적극적 자유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외부 간섭의 부재에 만족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과 자기실현을 위한 자율적 삶을 중시하는 것이다.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들은 대체로 개인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자유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각자의 양심과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주체적 시민이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나)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써 성취해야 하는 정치적 결과물이며, 공동체의 의무와 결합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지만, 개인의 우선성을 강조했던 자유주의에 비해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했다. 즉,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며, 공동선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이상적인 시민으로 여긴다.

이러한 공화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아테네 전통의 시민적 공화주의와 마키아벨리의 영향을 받은 로마 전통의 신로마 공화주의이다. ㉠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인간의 타고난 사회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국가 안에서만 도덕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치 참여란 시민의 의무이자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치 참여가 덕성을 함양하는 일이자 윤리적 자기실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개인의 권리나 이익보다 시민의 정치적 의무를 더 우선시하였고, 이런 의무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신로마 공화주의자들 또한 시민적 공화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정치 참여와 같은 시민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 참여의 근거를 인간의 자연적 사회성이나 윤리적 자기실현에서 찾지 않았다. 그들에 따르면, 정치 참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외세와 폭정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제시하였다.

비지배 자유의 핵심은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즉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간섭의 부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사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상태를 지향한다. 그들은 공공의 법으로써 이러한 자유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공화국의 법은 시민의 참여 속에서 공동의 결정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공화국의 시민은 자신이 만든 법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자유의 근거를 자연권에서 찾는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시민들 스스로가 심의하고 제정한 헌법에서 찾는다.

한편,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자치와 자율적 시민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부합하여 오늘날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1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자유주의의, (나)는 공화주의의 시대에 따른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가)는 자유주의가, (나)는 공화주의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가)는 자유주의가, (나)는 공화주의가 현대 사회에서 지니는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가)는 자유주의가, (나)는 공화주의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⑤ (가)는 자유주의의, (나)는 공화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한 특정 철학자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17.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주의 사상을 토대로 의무보다 권리를 우선시한다.
- ② 자유주의에서 시민의 권리인 자유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배제되어야 누릴 수 있다.
- ③ 공화주의에서 권리는 시민의 의무를 책임 있게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 ④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서 의무는 모두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 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서 시민이 누려야 할 자유의 바탕이 되는 근거는 서로 다르다.

18. <보기>의 입장에서, (가)의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의 활동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다. 자유란 그저 한 사람이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 ① 자유는 개인이 공동선을 추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 ② 자유는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
- ③ 자유는 시민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천부의 자연권에서 나오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 ④ 좋은 의도의 합리적인 국가 간섭이 소극적 자유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 ⑤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19.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공의 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② ㉠은 시민의 정치 참여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③ ㉡은 인간의 본질적 특성인 사회성을 정치 참여의 근거로 보았다.
- ④ ㉡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인간의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⑤ ㉠과 ㉡은 모두, 윤리와 정치를 구분하지 않고 정치 참여의 목적을 윤리적 덕목을 함양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2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가 자기 소유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건물이 들어설 토지의 일부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생활 도로로 오랫동안 쓰이고 있었다. 구청은 도로가 막히면 주민들이 다른 길을 찾기 위해 우회해야 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A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는 자신의 사유지에 건물을 세울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도로가 법정 도로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중요한 생활도로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구청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 ① 공화주의자들은 구청 측의 주장이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겠군.
- ② 공화주의자들은 구청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합리적 판단이라 생각하겠군.
- ③ 공화주의자들은 A를 공동선에 관심을 가지는 이상적 시민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판단하겠군.
- ④ 자유주의자들은 A가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므로 A의 소송 제기를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겠군.
- ⑤ 자유주의자들은 A 소유의 토지 일부를 생활도로로 사용하려면 A의 자발적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로고스를 가진 유일한 동물이자 정치적 동물이라 정의한다. ‘로고스’는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동물은 목소리를 통해 고통이나 쾌감만을 전달하지만, 인간은 로고스를 통해 무엇이 좋고 나쁜지 ㉠ 분별할 수 있으며, 자연이 인간마다 다르게 부여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인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며, 완전한 공동체인 폴리스 안에서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일을 결정함으로써 최상의 좋음에 ㉡ 도달할 수 있는 정치적 동물이라 보았다. 이때 그는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 간의 평등 보장을 위해 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 아렌트 역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폴리스와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인 공적 공간에서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공적 공간에서 공동의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행위’라고 규정했으며, 행위는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인 다원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다원성은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지만 개별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아렌트에 따르면 이러한 다원성으로 인해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내려고 한다. 따라서 행위에는 반드시 말이 수반된다고 하였다.

아렌트에 따르면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적 공간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 공적 문제를 결정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정치적 자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으로, 개인적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내고 공동의 일에 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때 그녀가 말하는 권력은 지배자의 소유가 아니다. 아렌트는 정치가 오직 권력 쟁취를 위한 과정으로만 이해됨을 비판하고, 권력은 시민들이 의견을 나눌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므로 권력은 이미 공적 공간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정치적 자유를 향유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렌트는 공적 공간을 형성하고 보존하기 위해 사람들이 약속을 통해 구성한 제도적 장치가 헌법이며, 혁명의 진정한 목표는 헌법 제정을 통한 정치적 자유의 확립이라고 보았다. 그녀에 따르면 법은 궁극적으로 시민 사이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은 비언어적 수단인 폭력이 아닌 발언을 통해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렌트는 ㉣ 법의 정당성은 법이 개인들 간의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후 행위를 보장하는 경우에만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은 권력을 독점하려는 지배자를 저지하고 시민이 권력을 나누어 갖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렌트의 철학은 정치가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행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준다.

(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서구 전통 철학은 말과 이성에 우위를 부여해 왔다. 이는 순수한 근원적 원리가 실존한다고 본

서구 전통 철학이 고정된 의미로서의 동일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글과 달리 말은 고정된 의미를 ㉤ 담보할 수 있으며, 그때그때 변하는 감각이나 감정과 달리 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크 데리다는 이렇게 순수한 근원을 상정하는 서구 전통 철학을 ‘로고스 중심주의’로 규정하고, 로고스 중심주의가 서구 중심주의의 기반이 된다고 비판했다. 서구 전통 철학이 ‘말 대 글’, ‘이성 대 감정’ 등의 이분법적 사고를 낳았으며, 전자를 중심에 두고 후자를 타자화함으로써 타자를 배척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리다는 지금까지 정당하다고 ㉥ 간주되어 온 법·정치 질서를 해체하여 순수한 근원에 대한 환상을 깨고자 했다.

데리다는 입헌 정치 체제에서 다른 법에 정립 근거를 제공하는 헌법은 이제껏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창출되었다는 믿음을 통해 정당화되어 왔지만, 헌법은 제한 권력인 국가가 성립된 이후 소급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제한의 순간에는 제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선험적 법 규범이 부재하기에 제한 행위는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폭력과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 헌법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 법은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데리다는 법질서의 해체와 재구축을 통해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질서의 해체를 통해 법의 정당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해체하고 은폐된 폭력을 드러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법과 정치 질서를 재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정의는 언제나 불안정하기에 정의를 향한 해체는 종결되지 않는다. 즉 데리다는 법의 정당성은 정의 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해체와 재구축의 반복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리다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는 타자를 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제한의 순간 형성된 국가는 ‘우리’라는 동일성을 중심에 두고 경계를 설정하며, 이러한 경계는 국경 통제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나타난다. 데리다는 국가의 동일성이 우연히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다고 지적하며, 이질적인 것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국가의 틀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배제를 줄여 나감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데리다의 철학은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변부 문화에 주목하고 상대주의적 사고에 관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로고스에 대한 여러 철학자의 주장을 시대적 배경과 연관지어 고찰하고 있다.
- ② (나)는 로고스를 중심으로 한 사상의 경향을 언급하고 이를 비판하는 철학자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로고스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보인 철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고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로고스의 개념을 정의한 후 개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로고스라는 개념을 수용하여 발전시킨 철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있다.

5. (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ㄱ)와 아렌트의 견해(ㄴ)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ㄱ은 폴리스에서 최상의 좋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ㄴ은 공적 공간에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② ㄱ은 로고스를 통해 타고난 목적에 맞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ㄴ은 로고스를 통해 고유한 정체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 ③ ㄱ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이고, ㄴ은 인간이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으로 인해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 ④ ㄱ과 ㄴ은 모두 법을 통해 시민 간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⑤ ㄱ과 ㄴ은 모두 말을 통해 공동의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권력 쟁취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다음은 갑과 을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갑: 데리다는 끊임없이 법질서를 해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법질서를 모두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질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허무주의가 아닐까?
 을: 데리다의 철학은 허무주의가 아니야. 왜냐하면 데리다의 해체 철학은 ㉠하는 철학이기 때문이야.

- ①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감으로써 법질서의 해체와 재구축을 종결
- ② 법의 정당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권위에 대한 믿음을 해체
- ③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불안정한 경계를 안정화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창출
- ④ 정의롭지 않은 법에 대한 해체와 법질서의 재구축을 반복함으로써 이질적인 것에 대해 개방된 사회를 추구
- ⑤ 정의의 기준을 재사유함으로써 완전한 정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법적 질서를 구축하여 법질서의 해체를 지향

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공적 공간에서 공동의 생활 참여가 중요함을, ㉡은 국가 설립의 기반이 부재함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 ② ㉠은 특정인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것을, ㉡은 제한 행위라는 폭력이 정당화되어 온 것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 ③ ㉠은 로고스를 통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은 근원적 원리로서의 로고스가 실존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 ④ ㉠은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결정하는 것에, ㉡은 맹목적인 믿음의 해체를 통해 법에 은폐된 폭력을 드러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 ⑤ ㉠은 개인적 욕망에 따른 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 질서 확립의 시급성에, ㉡은 서구 중심주의를 해체하기 위한 정치 질서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절대 왕권 체제였던 A 국에서 평민들의 혁명이 일어났다. 투표로 선출된 각 지역 대표들은 많은 토의 끝에 국민 주권론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국민에게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하는 헌법을 제정하여 B 연방국을 설립하였다. B 연방국은 주민 자치 제도를 보장하고 주민 의회를 통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B 연방국의 C 지역에서 이민자들이 교육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C 지역의 주민 의회는 이민자에게 C 지역 주민과 동등한 교육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발안하였다.

- ① A 국에서의 혁명으로 B 연방국이 설립된 것에 대해 (가)의 아렌트는 혁명의 진정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겠군.
- ② B 연방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 (가)의 아렌트는 권력이 내재되어 있는 공적 공간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겠군.
- ③ B 연방국이 주민 자치 제도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 (가)의 아렌트는 국민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 보겠군.
- ④ C 지역의 이민자들이 교육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나)의 데리다는 국가의 틀로 인해 타자에 대한 배제가 발생한 것이라 보겠군.
- ⑤ C 지역의 주민 의회에서 법률을 발안한 것에 대해 (나)의 데리다는 동일성을 중심으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줄여 나가는 과정이라 보겠군.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를
- ② ㉠: 다다를
- ③ ㉠: 누릴
- ④ ㉠: 뒷받침할
- ⑤ ㉠: 여겨져

◆ 11 MDEET 언어추론 14~16번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세기 영국의 사상가 버크는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 대중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다. 일반 국민이란 무지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다지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래서 그는 계약에 의해 선출된 능력 있는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지도자로서 국가를 운영케 하는 방식의 대의제를 생각해 냈다. 재산이 풍족하여 교육을 충분히 받아 사리에 밝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다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대의제란 지도자가 성숙한 판단과 계몽된 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 여기서 대의제의 본질은 국민을 '대표'하기보다 국민을 '대신'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즉 버크는 대중이 그들 자신을 위한 유·불리의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독립적 판단을 통해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버크에 따르면 국민은 지도자와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했다기보다는 '신탁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는 개별 국민들의 요구와 입장을 성실하게 경청해야 할 의무 대신에, 국민 전체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서 대신할 의무가 있다. 그는 만약 지도자가 국민의 의견을 좇아 자신의 판단을 단념한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18세기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했던 페인은 국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주목했다. 그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타고났으므로, ㉠ 사회적인 차별은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했다. 또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기에 권리의 보장을 위해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자유권, 재산권, 안전권, 압제에 대한 저항권을 포함하는 당시로선 다소 급진적으로 여겨지는 권리 개념까지도 수용하였다. 이런 전제 아래, 페인은 국가란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각자 주권을 갖고 지도자와 상호 계약을 체결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 통치를 지도자에게 일방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는 권리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국가나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최고의 의무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공정한 국가나 국가의 지도자란 공히 어떤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것이 헌법을 만드는 데에도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원칙의 핵심은 소멸될 수 없고 양도될 수도 없는 신성한 인간 권리의 수호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국민 개개인의 절대적 권리보다는 탁월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국민의 자질을 강조하였다. 즉 아무리 국민이 민주적이며 자발적으로 지도자를 선택해서 선출한다고 해도, 지도자가 명령을 내리고 일반 국민이 이에 따르는 한에서는, 권력 관계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은 현실적으로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이런 한계 속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적절한 자질이 중요하다고 러셀은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일단 선출된 지도자의 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태도나, 반대로 소수의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태도 모두를 지양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도자를 선택한 이후에도 모든 것을 지도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을 통해

지도자의 결정에 대한 수용과 비판의 지속적인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도자나 국민 모두 회의주의나 극단주의에 경도되는 것을 경계해야 민주 국가에서 지도자와 국민의 바람직한 관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4. 버크, 페인, 러셀의 공통된 견해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다수결의 원칙은 신성불가침한 것이다.
- ② 국민과 지도자의 관계는 계약 관계이다.
- ③ 지도자는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④ 국민은 존엄성을 지닌 신뢰할 만한 존재이다.
- ⑤ 국민은 지도자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15. 위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버크가 말하는 지도자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② 버크는 국민의 자질이나 역할보다 지도자의 능력을 더 중시했다.
- ③ 페인에 따르면 국민은 권리 보장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
- ④ 페인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지도자의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 ⑤ 러셀에 따르면 민주적 선거는 국민과 지도자 간 권력 관계의 평등을 보장한다.

16.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시간대에 고속도로 전용 차선제를 실시하여 진입이 허용된 차량 이외의 차량의 진입을 제한한다.
- ② 전염성 질환이 발생함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자 발생 지역 주민의 출입을 제한한다.
- ③ 성범죄 전과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한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자 발찌를 강제로 착용하게 한다.
- ④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주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들의 단지 내 관통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 ⑤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한해 개발을 제한한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화주의란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의 정치 참여에 기초하여 공동체적 삶에서 자의적 권력에 의한 지배를 배제하고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이에 적합한 형태의 공동체에 관해서는 주로 그 규모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의가 이어져 왔다. 시민적 덕성이 제대로 발휘되어 파벌이 통제되기 위해서는 공화국의 크기가 작아야 하지만, 외세의 침략 위협에 맞서 충분한 안전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크기가 커야 할 것이다. 미국 헌법 제정기의 **연방주의자**인 『페더럴리스트 페이퍼』(1787. 10~1788. 8)의 저자들은 바로 연방 공화국의 형태가 공동체 내부의 부패와 대외적 취약성을 둘러싼 공화주의의 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파벌 지도자의 영향력이 확산되지 못하게 막는 분할의 이익과, 한데 뭉쳐 외부의 적에 대항하도록 하는 결집의 이익을 함께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공동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지만, 가까이 있어서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보다 불가피하게 소원한 거리에 놓인 사람들이 우정과 연대의 공적 정신을 유지하기란 더 어려울 수 있다. 광대한 영토 위에서 공화주의 정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사익의 추구를 자제하고 공동선을 지향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연방주의자들은 대의제와 권력분립 등 헌정주의의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이성과 법의 지배를 통하여 파벌과 전제적(專制的) 다수의 출현을 방지하고자 했다. 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정이 사그라지거나 폭주하지 않도록 헌법의 틀을 씌웠던 것이다.

그런데 헌법이라는 것에 대한 공화주의자들의 이해는 오늘날의 지배적인 견해와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오늘날 헌법은 주로 정치 공동체의 실질적인 가치 기준과 운영 원칙을 정하는 견고한 문서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헌법은 헌법적 논쟁들에 대해 판단해 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헌법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정작용이나 법률은 그 효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지극히 법적인 의미로 이해된 헌법과는 달리, 공화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헌법이란 단순히 정치 공동체 내에서 권력이 분할되는 방식을 나타내거나 그렇게 구성된 특수한 정부 형태를 지칭하는 정치적인 의미의 것이었다. 통치자의 선출과 정치적 지분의 할당을 통해 경쟁적 사회 집단 사이에 이해관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은 로마의 혼합정체 이래 지속 가능한 공화국의 골자를 이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8세기 후반에 비로소 등장한 법적 의미의 헌법 개념은 당시 미국의 공화주의적 헌법을 구상하는 과정에서조차 의도되었던 바가 아니며, 성문의 헌법을 채택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은 사법적 헌장이라기보다는 시민의 헌장을 갖는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공화주의와 관련하여 우리가 헌법의 의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법적 의미의 헌법 개념을 과거의 공화주의 사상가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헌법을 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전제에서 공화주의를 위하여 제안되는 이른바 ① **헌정주의적 수단**들이 역으로 공화주의의 핵심적 목적과 충돌하게 된다는 문제 때문이다. 예컨대, 그러한 수단의 하나로 제안되는 법

률의 헌법 기속 개념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대표들이 다수결로 도출하는 합의를 불신한다는 면에서 공동체적 삶의 향배를 시민들의 손에 맡기고자 하는 공화주의의 이상에 반하는 것이며, 그보다는 차라리 국가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사고의 장치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바꿔 말해서 소수의 현자들에 의한 사법 심사의 과정으로 뒷받침되는 헌법은 더 이상 공화주의적이지 않으며, 나아가 미국의 민주정치가 발전하는 데도 방해가 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민주정치의 상황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는 통치자의 선출이나 할당된 지분의 행사에서처럼 투표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공적인 토론의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만약 사법 심사의 장이 그와 같은 토론의 과정을 촉발시키고 이끄으로써 궁극적으로 법의 지배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동선에 관한 이성적 숙의에서 찾곤 했던 공화주의자들의 관점을 다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공화국의 광대한 영토는 대외적 방어에 불리하다.
- ② 공화주의자는 시민으로서의 삶보다 개인으로서의 삶을 중시한다.
- ③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의 저자들은 안전보다 연대를 추구하였다.
- ④ 연방주의자는 공화주의의 딜레마가 지닌 정치적 함의를 간과하였다.
- ⑤ 로마의 혼합정체는 공화국의 대내적 균형을 확보해 주는 장치였다.

12. **연방주의자**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방 공화국의 정부 형태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헌법의 개념이 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선출된 대표가 파벌 지도자로 변질되는 것을 연방이라는 헌정 체제를 통해 견제할 수 있다.
- ③ 공화국에 대한 내부 위협은 소규모의 파벌이 광대한 영역 기반의 대규모 파벌로 커질 때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 ④ 규모가 커진 공화국은 구성원들의 사회적 다양성도 커져서 정치적 분열이 초래되어 전제적 다수가 형성되기 어렵다.
- ⑤ 인간 본성에 자리하고 있는 파벌의 싸움은 근절될 수 없으므로 그것의 발호를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대응해야 한다.

13.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적인 토론의 과정을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 과정으로 대체한다.
- ② 헌법적 가치의 선언을 통해 의회의 결정 권한에 대한 제한을 공식화한다.
- ③ 성문화된 헌법은 최고법적 효력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긴장 관계에 놓일 수 있다.
- ④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인정하여 상호 견제를 통한 권력의 제한을 꾀한다.
- ⑤ 법의 지배는 그 누구의 지배도 아니라는 점에서 자의적 권력의 지배를 거부하는 공화주의 이념과 연결된다.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 헌법은 권력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대통령 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 정치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독식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 설계는 미국 역사에서 상당 기간 성공적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헌법이라는 보호 장치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지키기에 충분치 않다. 여기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화되지 않은 민주주의 규범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위태로워진다. 민주주의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규범은 민주주의보다 오랜 전통을 가진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이다. 상호 관용은 경쟁자가 권력을 차지할 권리를 나와 동등하게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상대를 위협적인 적으로 인식할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기려 한다. 제도적 자제는 제도적으로 허용된 권력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이다. 합법적 권력 행사라도 자제되지 않을 경우 기존 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제도적 자제의 반대 개념은 '헌법적 권력의 공격적 활용'이다. 이는 규칙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자를 경쟁의 장 자체에서 제거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 규범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상대를 경쟁자로 받아들일 때, 제도적 자제도 기꺼이 실천한다. 제도적 자제의 실천은 관용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함으로써 선순환이 이뤄진다. 반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할 때 상호 관용의 규범은 무너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인은 제도가 부여한 법적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려 하며, 이는 상호 관용의 규범을 잠식해 경쟁자가 적이라는 인식을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민주주의 규범이 붕괴하면 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두 가지 상황에서 위기를 맞게 된다. 첫 번째 상황은 야당이 입법부를 장악하면서 행정부 권력과 입법부 권력이 분열되었을 때이다. 이 경우 야당은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헌법에서 부여한 권력을 최대한 휘두른다. 두 번째는 여당이 입법부를 장악함으로써 권력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여당은 민주주의 규범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야당을 제거하기 위한 대통령의 탄압적 행위를 묵인하기도 한다.

미국 민주주의는 건국 이후 두 번의 큰 위기를 겪는다. ① 첫 번째 위기는 남북 전쟁으로 초래되었다. 노예제를 찬성한 남부의 백인 농장주들, 그리고 그들과 입장을 같이 한 민주당은 당시 노예제 폐지를 주장한 공화당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남부는 미국 연방에서 탈퇴했고 결국 내전이 일어났다. 민주주의 규범이 다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북부의 공화당과 남부의 민주당이 인종 문제를 전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부터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북부는 연방의 유지 등 정치적 필요에 의해 남부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흑인의 인권 보장 노력도 중단한다. 민주당은 남부에서 흑인 인권을 억누르면서 그 지역에서 일당 지배의 기반을 구축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공화당에 대한 민주당의 적대감은 완화되었고, 그 결과 상호 관용의 규범도 회복된다. 역설적이게도 남북 전쟁 이후의 민주주의 규범은 인종 차별을 묵인한 비민주적인 타협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백인 중심으로 작동했던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② 두 번째 위기는 1960년대 이후 민주주의의 확대와 함께 일어

났다. 흑인의 참정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고, 대규모 이민으로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정치 체제로 유입되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기 다른 집단의 이익과 가치를 대변하게 되었다. 이후 양당 간 경쟁은 '당파적 양극화'로 치달았다. 보수와 진보 간 정책적 차이 뿐만 아니라 인종과 종교, 삶의 방식을 기준으로 첨예하게 나뉘어 정당 간 경쟁이 적대적 갈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종 차별에 의존한 기존의 민주주의 규범은 한계를 보이면서 붕괴했다. 따라서 미국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 규범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2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상호 관용이 강화되면 제도적 자제는 약화되고 상호 관용이 약화 되면 제도적 자제는 강화된다.
- ② 대통령과 입법부의 권력 행사가 합법적인 한, 민주주의 정치 체제 보호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 ③ 민주주의 규범은 민주주의 이념으로부터 탄생한 것으로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을 통해 발전된다.
- ④ 민주주의 규범은 헌법이나 법률로 성문화될 때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보호하는 효과가 극대화된다.
- 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민주주의를 보호하고자 한 헌법의 목적을 실현 가능하게 한 것은 민주주의 규범이다.

23.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거치면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의 규범이 건국 이후 처음으로 형성되었다.
- ② ㉠ 이후 형성된 민주주의 규범은 인종 차별적 특성으로 인해 정치 체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 ③ ㉡은 민주주의의 확대를 촉발된 당파적 양극화가 기존의 민주주의 규범을 붕괴시켰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 ④ ㉡은 다양한 집단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점차 완화되었다.
- ⑤ ㉠에서는 ㉡에서와는 달리 정당별 지지 집단이 뚜렷이 구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칠레는 성공적인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였다. 좌파에서 우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당이 있었지만, 20세기 초 이후 민주주의 규범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념적 대립에 따른 ㉠ 당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 좌파와 우파 정당은 서로를 위협적인 적으로 인식했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좌파 정당의 아옌데는 사회주의 정책 추진을 위해 의회의 협조가 필요했으나 여당은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 그는 의회를 우회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했다. 이에 ㉣ 좌파 야당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불신임 결의안을 잇달아 통과시켜 장관들을 해임했다. 칠레 헌법은 의회가 불신임 결의를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 1970년 이전까지 그것이 사용된 적은 거의 없었다. 결국 1973년 8월 칠레 의회는 아옌데 행정부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곧이어 군부 쿠데타가 발생함으로써 칠레 민주주의는 붕괴했다.

- ① ㉠은 좌·우 이념을 중심으로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심화된 당파적 양극화와 성격이 다르군.
- ② ㉡로 인해 1960년대 이후 칠레에서는 상호 관용의 규범이 붕괴되는 과정이 일어났겠군.
- ③ ㉢로 볼 때, 아옌데 대통령은 권력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함으로써 제도적 자제 규범을 실천하고자 했겠군.
- ④ ㉣로 볼 때, 민주주의 규범이 붕괴된 상황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 소수당인 경우 야당이 헌법적 권력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군.
- ⑤ ㉤로 볼 때, 1970년 이전의 칠레 정치인들은 민주주의 규범을 존중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했겠군.

◆ 10 LEET 언어이해 16~18번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789년 프랑스 혁명 초기에 제정된 중간집단 금지에 관한 법들은 개인의 활동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동업조합, 상인조합은 물론 정당 활동까지 금지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체로서의 개인만을 사회에 남겼다. 루소는 이미 국가에서 특수의지를 표명하는 부분 집단의 존재를 제거하고 각개의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 함으로써 일반의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이성을 가진 개인의 합리적인 사회적 행위를 통해 일반 이익을 실현하는 국가 권력을 확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하지만 과연 모든 개인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공공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들의 산술적 합으로서의 '수'가 이성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현실적인 보장도 없었다. 이러한 '이성'과 '수'의 긴장은 혁명 시기와 이후 프랑스 정치사에서 '이성'에 의해 표상되는 자유주의와 '수'에

의해 표상되는 민주주의의 갈등으로 표현되었다.

우선 혁명 시기 '수'에 대한 '이성'의 우위가 드러난 대표적인 예는 '수'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제한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은 선거를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공적인 '기능'으로 간주하였다. 선거권의 제한은 공적인 결정을 합리화하고 민주주의라는 '수'가 갖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들에게 선거는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지를 해석하고 일반 이익을 잘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명하는 행위였다.

혁명이 급진화되면서 '수'로 표상되는 인민의 민주주의적 실천이 등장하였다. 외국과의 혁명 전쟁이 시작되면서 조국의 위기가 선언되고,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상퀼로트들도 국민방위대에 들어갔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승인하지 않은 법을 거부하고 주권을 직접 행사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상퀼로트들의 힘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로베스피에르는 인민의 민주주의적 실천을 '덕성'의 이름으로 제한하였다.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는 공화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민이 공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덕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공화국의 제도 안에서만 인민의 정치적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한정하였다. 덕성이란 '조국과 법에 대한 사랑이며, 개인적 이익을 일반 이익에 종속시키는 숭고한 자기 희생'이었다. 덕성에 대한 강조는 민주주의의 제한과 대표의 절대화—대표와 국민의 일치를 통한 대표의 절대 권력—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1789년 이후 19세기 동안 '이성', '수' 그리고 '덕성' 사이의 긴장 속에서 프랑스는 정치적 혼란의 위험에 시달렸다. 중간집단의 부재를 그 주요 원인으로 들었던 토크빌이 지적했듯이, 민주주의는 혁명을 통해 절대왕정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중앙집권화에 기반한 거대 권력에 의존함으로써 '이성'과 '덕성'이 약화되어 전제정으로 귀결되었다. 민주주의자이면서 동시에 귀족정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토크빌은 귀족정 시대 중간집단의 역할에 다시 주목하였다. 혁명과 함께 그것들이 사라지면서 개인들은 시민적 덕성을 함양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국가는 그 권력을 제어할 견제 세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토크빌은

① 민주주의 시대 중간집단이 정치적 자유가 실현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종결지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제3 공화국은 새로운 사회적 필요에서 중간집단을 다시 허용하였다. 뒤르켐은 분업이 급속하게 진행된 당시 사회에서 직업적 도덕을 형성하고 나아가 국가와 개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직업 집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프랑스 혁명이 발생한 후 백여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중간집단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다. 또한 19세기 말 정착되기 시작한 정당 체제는 새로운 엘리트 층원 구조이자 여론의 형성자로서 자리 매김 된다.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드러내는 정당 체제는 시민과 국가권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통제하는 방식이 되었다.

16. 위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루소는 일반의지 형성에 방해가 되는 중간집단의 제거를 원하였다.
- ② 혁명 초기 자유주의자들은 대의제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장치로 간주하였다.
- ③ 상퀼로트들은 혁명이 급진화된 시기에 등장하여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였다.
- ④ 로베스피에르는 민주주의적 실천을 공화국의 제도 내에 한정하였다.
- ⑤ 뒤르켐은 직업 집단이 국가와 개인 사이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17. 위 글에 등장하는 '수', '이성', '덕성'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성'과 '덕성'이 '수'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성립되었다.
- ② '이성', '덕성'의 전체 능력이 위축되면서 '수'의 민주주의는 전체 정으로 귀결되었다.
- ③ '이성'과 '덕성'을 갖추게 됨으로써 '수'는 대표 없이 주권의 직접 행사를 통한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
- ④ '이성'이나 '덕성'은 '수'의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수'의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였다.
- ⑤ '덕성'을 매개로 하여 '수'와 '이성'을 일치시키려는 시도는 국민과 대표의 동일시를 가져와 절대 권력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18. ㉠에 대한 '토크빌'의 기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중간집단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학부모 단체
- ②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견해들을 수렴하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시민 사회 단체
- ③ 노동자 정당과의 연계 속에서 조합원들의 이익 옹호와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조합
- ④ 경제 현안의 해결과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 문제 대책 위원회
- ⑤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를 통해 공론을 주도하고 시민 의식을 함양하며 권력에 대해 비판하는 지식인·학자들의 독자적 집단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3공화국(1875~1940)이 수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노동자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여 세력화한 사건은 프랑스 정치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다. 강력한 노동조합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노동자 정당은 의회주의 노선을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공화국 체제를 넘어서려는 혁명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3공화국으로서 가장 강력한 위협 세력이 될 수 있는 노동자 정당의 문제 제기를 적극 수용하면서 대의제를 핵심으로 한 체제를 안정화해야 할 이종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제의 수행은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 분립의 원칙 및 국가의 역할에 매우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우선 노동자 정당의 세력화는 기왕의 의회주의적 대의제 개념에 균열을 가져왔다. 투표함 앞에서 모두가 한 표씩의 권리를 행사하는 평등한 시민의 이익만이 아닌, 특정한 집단들의 특수 이익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해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되었다. 개인뿐 아니라 직업 집단이나 조합 등까지도 대표의 단위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평등한 개인들을 대표한 입법부의 절대적 지위에 변화가 생겼다. 그 대신 행정부가 이익들을 대표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였다. 예를 들어 1890년에 정부 내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06년에는 이것이 노동부로 개편되었다.

행정부는 특화된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장점으로 지닌 다양한 자문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대의적 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해 갔다. 나아가 대의제를 다양한 이익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정의하면서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대표로서 기능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자라는 국가의 상(像)이 정립되었다. 제3공화국은 78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했다. 그 절정은 국가 경제 위원회(1916)였다. 국가 경제 위원회는 37개 직업 집단으로 구분된 대표 체제를 형성하여 국가 경제 활동의 충실한 대표가 되었다. 국가는 전문적인 기술과 장치들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특수 이익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의 조정과 소통을 통해 일반 이익을 형성하며, 나아가 일반 이익의 형성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한편 노동자 정당의 세력화는 사회적 연대의 형성과 강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제3공화국 초기에 정부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국한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직업 단체 결성의 자유 보장, 교육의 확대, 국민자의 보호 등에 한정하면서 사회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정부의 대책도 생활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시혜적 성격의 부조에 머물렀다. 하지만 노동자 정당이 세력화하면서 국가는 사회 문제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정치를 지향하는 연대주의를 제시했다.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앞서 모두가 자유로운 사회 계약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연대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모두로부터 거리를 두는 복지 국가를 개념화한 것이기도 했다. 그 단적인 예가 실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실업 보험 제도의 도입(1914)이었다. '실업'과 '실업자'라는 개념을 고안해 낸 국가는 이 문제를 개인의 무능과 게으름이 아닌, 사회적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실재로서 인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복지 정책이 노동자 정당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사회적 연대의 결실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를 통해 국가는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면서 노동자 계급을 자신의 구성원으로 포섭하였다.

노동자 정당의 출현과 함께 일어난 대의제 개념의 변동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형성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였다. 그것은 대표 기관으로서의 국가의 정당성 확보와 시민 권리의 확장이라는 두 요소가 확장된 대의제를 통하여 순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민주주의의 원환(圓環)을 형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원환 속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려 했던 노동자 정당은 체제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던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교육자, 나아가 적극적인 보호자로서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삶 자체를 관리하는 거대 권력이 되었다. 국가 권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자로 등장하였던 노동자 정당마저도 그 거대 권력 속에 포섭되어 권력기관화되었다. 이 점에서 오늘날 국가를 민주주의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2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행정부 내의 위원회들은 거의 모든 공적 영역을 포괄하였다.
- ② 노동 위원회의 설치에 행정부의 권한과 역할 강화에 기여하였다.
- ③ 행정부는 권력의 정당성을 공적 기능의 확대를 통해 획득하고자 하였다.
- ④ 제3공화국 초기에 정부는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 ⑤ 복지 국가의 개념이 확립된 이후 부조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의 기본 대책이 되었다.

25. 제3공화국에서 민주주의의 변동 과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 연대를 통한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강화
- ② 사회 문제를 인식하기 위한 국가의 기능 확대
- ③ 의회주의를 통한 특수 이익 대표 체제의 강화
- ④ 사회 정의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 요구
- ⑤ 노동자 정당의 성장과 체제 내 포섭

26.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부 내 위원회 확충을 통한 행정의 전문성 제고
- ②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역할의 강화
- ③ 정책 감시와 같은 시민의 정치 참여 통로의 다양화
- ④ 효율적인 여론 수렴 방식을 통한 정책의 정당성 확보
- ⑤ 특수 이익들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국가 자율성의 확보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역할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은 책임 정당정부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치에 참여하는 각각의 정당은 자신의 지지 계급과 계층을 대표하고, 정부 내에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주도하며,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유럽에서 정당은 산업화 시기 생성된 노동과 자본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 경제적 균열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을 조직하고 동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당은 당원 중심의 운영 구조를 지향하는 대중정당의 모습을 띠었다. 당의 정책과 후보를 당원 중심으로 결정하고, 당내 교육과정을 통해 정치 엘리트층을 충원하며, 정치인들이 정부 내에서 강한 기율을 지니는 대중정당은 책임정당정부 이론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당 모형이었다.

대중정당의 출현 이후 정당은 의회의 정책 결정과 행정부의 정책 집행을 통제하는 정부 속의 정당 기능, 지지자들의 이익을 집약하고 표출하는 유권자 속의 정당 기능, 그리고 당원을 확충하고 정치 엘리트층을 충원하고 교육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당 기능을 갖추어 갔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발생한 여러 원인으로 인해 정당은 이러한 기능에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산업 구조와 계층 구조가 다변화됨에 따라 정당들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지지만으로는 집권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유권자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고자 했다. 그 결과 정당 체계는 특정 계층을 뛰어넘어 전체 유권자 집단에 호소하여 표를 구하는 포괄정당 체계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선거 승리라는 목표가 더욱 강조될 경우 일부 정당은 외부 선거 전문가로 당료들을 구성하는 선거전문가정당 체계로 전환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계층과 직능을 대표하던 기존의 조직 라인인 당 조직의 외곽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한편 탈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환경, 인권, 교육 등에서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탈물질주의가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정당의 출현에 대한 압박이 생겨났다. 이는 기득권을 유지해온 기존 정당들을 위협했다. 이에 정당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 정치 자원의 과점을 통해 신생 혹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나 정치 활동을 어렵게 하는 카르텔정당 체계를 구성하기도 했다. 다양한 정치관계법은 이런 체계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선거제도의 예를 들면, 비례대표제에 비해 다수대표제는 득표 대비 의석 비율을 거대정당에 유리하도록 만들어 정당의 카르텔화를 촉진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당의 변화 과정에서 정치 엘리트들의 자율성은 증대되었고, 정당 지도부의 권력이 강화되어 정부 내 자당 소속의 정치인들에 대한 통제력이 증가되었다. 하지만 반대로 정당원의 권력은 약화되고 당원 수는 감소하여 정당은 지지 계층 및 집단과의 유대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뉴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정치에 관심은 높지만 정당과는 거리를 두는 ‘인지적’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정당 체계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당 조직과 당원들이 수행했던 기존의 정치

◆ 09 LEET(예비) 언어이해 26~28번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국가 권력에서 정통성이 없는 권위주의 정치 세력을 배제하고 선거 경쟁을 통해 정부를 구성하여 민주적 절차를 마련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을 증시하는 주창자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경쟁에서 다수의 표를 얻은 정당 및 정치인들이 국가 권력을 획득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민주주의를 정치적 경쟁 및 참여가 보장되는 기본적인 절차로 해석하는 것도 이러한 설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절차적 제도로는 투표권, 공무 담임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실질적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기적이고 공정한 선거 경쟁을 통해 대표와 정부가 구성되고 국민을 대변하는 절차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 균열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및 자원 배분상의 불합리로 권력 남용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만연하여 갈등과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그러므로 국민의 참여와 선택에서 연유하는 정치적 대표성이 보다 확고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대표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 기구가 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실현된 성과와 실적이 국민의 요구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응답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선출된 대표가 국민의 완벽한 대리인으로 행위하도록 통제해야 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 대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퇴출되는 책임성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다양한 국민의 참여를 통하여 사회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제도화함으로써 자기 지속적인 체제로 확립되어 가는 과정,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일컬어진다. 현대 사회는 시민 사회, 정치 사회, 국가 그리고 경제 사회 등 부분 체제들의 복합체이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각 부분 체제의 제도화 과정이고, 각 부분 체제들은 상호 의존적이다. 우선, 이익 표출 및 집약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 사회의 결사체들이 보다 포괄적으로 조직되어 협력하는 네트워크 및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이익 갈등을 조정했을 때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가능해진다. 사회 구성원 개인과 집단의 이해가 개별적으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결사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시민 사회 내의 요구 사항이 취합되어 갈등 조정이 용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 정당, 의회 등으로 구성되는 정치 사회가 사회적·경제적 균열로 인한 갈등을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범, 규칙 및 절차를 갖고 있을 때 민주주의는 공고화될 수 있다. 정치 사회의 공식 및 비공식 행위자들이 경제사회적 균열구조에 조응하여 편제되고, 이들의 이익을 정치 영역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할 때 민주주의는 보다 성숙되는 것이다.

아울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을 통해 갈등 조정을 시도하는 국가 능력, 그리고 경제적 지배 세력의 압력이나 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의 자율성 역시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중요한 관건이다. 국가가 특정 세력의 정치적·경제적 이해를 관철하는 도구적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합리적인 국가

운영을 통해 구성원의 이해를 통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갈등 확산을 방지하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결정적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시장을 매개하는 경제 사회가 자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 경제의 비윤리성을 치유하는 복지 제도를 통해 시장 실패자들이 겪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경제 사회 내의 합의를 중심으로 제도화할 때 민주주의는 공고화된다.

26. 위 글의 ‘대표성’, ‘응답성’,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 ② 선거를 통한 정치 권력의 탄생은 정치적 응답성을 보장한다.
- ③ 정치적 대표성은 정치적 응답성보다 책임성 보장에 기여한다.
- ④ 정치적 응답성은 정치 기구의 행위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의미한다.
- ⑤ 정치적 책임성은 대의제에서 정치 대표자에 대한 국민의 통제 행위와 관련된다.

27.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도입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민 사회의 신뢰 구축과 조정 기제를 강화한다.
- ② 경제사회적 균열 구조를 반영하는 정치 세력화를 억제한다.
- ③ 시민 사회의 활성화로 분산된 이익의 집약 통로를 확보한다.
- ④ 경제와 사회 지도층의 이익 독점을 통제하는 제도를 확립한다.
- ⑤ 시장 경제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사회적 합의 장치를 확충한다.

28. ㉠에 대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복수 노조 허용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의 갈등은 줄어들지 않았다.
- ② 피선거권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당선자 대부분은 재력가였다.
- ③ 보통·평등 선거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역 투표 성향은 강화되었다.
- ④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 ⑤ 법정 선거 연령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변화하지 않았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신의 대표자를 뽑아 국정의 운영을 맡기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근대 정치의 고전적인 딜레마가 내포되어 있다. 가령 입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의원과 소속 지역구 주민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가정해 보자. 누구의 의사를 우선하는 것이 옳을까?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의 행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뜻에 따라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조항에서 근거를 ㉠ 찾으면 될 것이다. 이 주장에서와 같이 대표자가 자신의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고 할 때 그런 대표 방식을 ㉡ 명령적 위임 방식이라 한다. 명령적 위임 방식에서는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가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다를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제46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는 이상 입법은 국회의원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의 목적은 국회의원 각자가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보다는 국가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지시에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대표자가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 방식을 ㉢ 자유 위임 방식이라고 부른다.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구체적인 국가 의사 결정은 대표자에게 맡기고, 국민은 대표자 선출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표자를 통제한다.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은 국민이 갖는 이 대표자 선출권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유 위임 방식은 헌법 제1조 제2항에도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국민이 대표자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화되어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극단적으로는 대표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의 의사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대표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도 한다.

47.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견해의 특징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두 견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③ 두 견해가 서로 인과 관계에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 ④ 두 견해의 공통점을 부각하여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한 견해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다른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48. <보기>의 상황에 ㉠, ㉡를 적용할 때, 타당한 것은? [3점]

—<보 기>—

어떤 나라의 의회 의원인 A는 법안 X의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소속 지역구 주민들은 법안 X가 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되리라는 우려에서 A에게 법안 X에 반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① ㉠: A는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 때는 X에 찬성할 수 있다.
- ② ㉠: A는 지역구 주민의 의사가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면 기권해야 한다.
- ③ ㉡: A는 반대하기로 선거 공약을 했다면 X에 반대해야 한다.
- ④ ㉡: A는 소속 정당의 당론이 찬성 의견이라면 X에 찬성해야 한다.
- ⑤ ㉡: A는 지역구 주민들의 우려가 타당하더라도 X에 찬성할 수 있다.

4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유 위임 방식을 채택한 국가에서 ㉡의 도입은 선택적이다.
- ② 법률안 등을 국민이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제도는 ㉡에 해당한다.
- ③ 명령적 위임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를 도입할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 ④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차별 없이 대표자 선출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에 해당한다.
- ⑤ ㉡의 도입은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50.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누나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 ② 아버지는 이 약을 복용하고 생기를 찾았습니다.
- ③ 그는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 ④ 형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으려 노력했다.
- ⑤ 그들은 자신의 안일과 이익만을 찾다가 화를 입었다.

◆ 14 LEET 언어이해 23~25번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의 민주주의는 유권자가 대표자에게 주권의 일부를 위임하고, 선출된 대표자는 관료 또는 기타 독립 기구에 권한의 일부를 다시 위임하는 연쇄적인 권한의 위임에 기초하여 작동한다. 그런데 후자의 위임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대의 민주주의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왜 후자와 같은 위임 행위가 발생하는가?

이에 대해 기능주의 이론은 주인-대리인 모델에 의거하여 답한다. 주인, 즉 정치 행위자들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정보의 불완전성과 집합 행동의 딜레마로부터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절감하려는 합리적 선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거래 비용에 정보 비용과 신뢰 비용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 이론은 둘로 나뉜다. 위임을 전문 지식과 정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으로 이해하는 ㉠ 정보의 논리와, 위임을 주인들의 집합 행동의 딜레마, 즉 주인들이 상호 불신으로 인해 전체의 합의에 따른 공동의 장기적 이익 대신 자신의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해하는 ㉡ 신뢰의 논리가 그것이다.

그런데 권한 위임에는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에 반해 행동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위임의 문제는 대리인에게 기대하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대리인의 배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문제로 압축된다. 이때 두 논리의 해법은 상이하다. 정보의 논리는 대리인이 더 많은 전문 지식과 정보를 가질수록, 또 주인과 대리인의 선호가 일치할수록 대리인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다고 본다. 반면 신뢰의 논리는 주인들로부터 독립된 선호를 가진 대리인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때 위임은 주인들의 집합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 두 논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정보의 논리는 대리인의 선호와 배반이 사후적으로만 관찰된다는 점에서 위임의 설계 단계에서 적용하기 어렵고, 신뢰의 논리는 주인들이 단기적 선호를 포기하고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집합 행동 문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따라서 위임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기능주의 이론이 아니라 정치적 거래 비용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치적 거래 비용 이론은 위임의 설계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쟁과 갈등에 주목하면서 위임을 정치적 불확실성과 분배의 갈등에 기초한 정치적 경쟁의 산물로 이해한다. 민주주의의 특징은 어떤 정치 행위자도 공공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안정적으로 갖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 정책이 미래의 정치 권력에 의해 합법적으로 바뀔 수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하에서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은 해당 정책을 정치 행위자들의 간섭과 각축에서 분리, 독립시키는 것이다. 위임은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거래 비용, 즉 '정치적 거래 비용'이 창출된다. 정치적 거래 비용이란 대리인에게 위임된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을 감시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일컫는데, 이 비용이 커질수

록 대리인은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책이 역전될 가능성은 줄어든다.

정치적 거래 비용을 매개로 한 위임의 제도적 설계는 정치 행위자들에게 정책의 안정성과 대리인에 대한 통제 가능성 간의 맞교환을 요구한다. 위임을 설계하는 세력은 대리인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정책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치적 거래 비용의 증가를 발생시킴으로 인해 대리인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스스로 봉쇄하게 된다. 정치 권력을 중심으로 각축하는 정치 세력들 사이의 정책 선호의 차이가 현저할수록, 그리고 정치 권력 교체가 빈번하거나 경합을 벌이는 정치 세력이 다수일수록,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높아지고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 정치적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거래 비용 이론은 위임을 정치 행위자들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분리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얻는 행위로 이해함으로써 정책 결정을 추동하는 조건과 그로부터 야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23. '위임'에 대한 위 글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위임은 정치적 경쟁 구조의 산물이다.
- ㉡ 위임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한다.
- ㉢ 위임을 주인-대리인 모델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 위임은 정치적 거래 비용의 절감을 위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
- ㉤ 위임은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방식이지만 그 원리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

2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은 선호하는 결과를 낳기 위한 주인들의 전문 지식이 부족할수록 대리인에게 많은 권한이 위임된다고 본다.
- ㉡ ㉡은 주인들 각자의 단기적 이익과 공동의 장기적 이익 사이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권한을 위임한다고 본다.
- ㉢ ㉠과 ㉡ 모두 합리성과 효율성의 관점에 기초하지만, 거래 비용의 상이한 측면에 주목한다.
- ㉣ ㉠과 ㉡ 모두 위임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정치적 경쟁 속에 있는 정치 행위자들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 ㉤ ㉠에서 발생하는 대리인의 배반과 ㉡에서 발생하는 집합 행동의 딜레마는 위임 설계 후에 확인된다.

25. [정치적 거래 비용 이론]을 적용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정치인들은 독립적인 중앙은행으로 통화 정책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는 그들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갖는 장기적인 효용에 대해 모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통화 팽창을 통해 단기적으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 ② 각국의 정치 행위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초국가적 기구를 만들어 그 기구에 정책 결정 및 집행의 권한을 많이 위임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그들 간의 정책적 선호의 차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③ 미국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위임된 일정한 재량권을 항상 확보하고 있다. 이는 의회와 행정부 간의 정책 선호의 불일치가 증가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위임의 실제 단계에서 의회 내 세력 변화 가능성이라는 요인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 ④ 유럽중앙은행은 유럽연합의 통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 거의 전권을 행사한다. 이는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결핍을 야기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 정치 행위자들의 간섭을 봉쇄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의 결과이다.
- ⑤ 국제 협력을 위한 초국가적 기구를 구성할 때는 국내 반대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도 협상 의제에 포함한다. 이는 국내 반대자들의 반론으로 인한 논란을 예방하여 국제 협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